

편집국에서

최현수

편집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오는 7월 공식 출범한다.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간 첫 통합사례다.

한뿌리인 광주와 전남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이다. 그동안 따로 살림을 해오다 40여년 만에 한지붕이 된다.

전남과 광주는 왜 광역 행정통합에 찬성했을까? 무엇보다 시·도민들은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한 규모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큰 틀의 공감대가 있었다.

이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아마도 정부에서 행정통합시에 매년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는 '통합 인센티브'였다. 20조원의 전문화적인 돈으로 나후지역의 미래성장을 설계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인 데다 통합과정의 후유증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라는 판단이다.

그렇다면 행정통합 시 전남광주에 4년간 매년 5조원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민심이 큰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예산 지원에 대한 의문을 품거나 우려의 목소리로 있다. 대통령은 물론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답은 확실치 않다.

행정통합 출범 준비를 위해 초기 정보시스템 통합 등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 573억원이 정부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아 출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지자체에 내려준 일부 교부금을 일부 활용할 방침이다. 결국 지방재정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행정통합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기고

박민국

광주청년센터 교류협력팀장



무난하게 자주 사용하는 브랜드가 있었다. 사무실과 집 그리고 차 안에도 그 브랜드 제품과 로고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 나눌 장소가 필요할 때 자주 이용하곤 했다.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딱히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용하던 브랜드였기에, 뒤늦게 드러난 사실은 큰 배신감과 불쾌감으로 다가왔다. 극우세력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무관심과 무대응이라고 들 하지만, 반복되는 문제와 그 확장 가능성을 생각하면 분노를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극우세력은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 내부에서 잠식하며 암세포처럼 문제를 키우고 옮긴다는 점에서 큰 문제다. 얼핏 보면 강력한 보수주의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집단에 가깝다. '일베'라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회적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기도 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례도 있었다. 작년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승격해 시설을 파괴하며 경찰뿐 아니라 민간인을 폭행한 사례. 그전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단식투쟁 농성장 앞에서 폭식 퍼포먼스를 펼친 사례가 있

취재수첩

코스피 랠리 뒤 그림자 '빛투'

엄재용

경제부 기자



코스피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투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지수가 연일 고점을 경신할 때마다 시장에는 지금이라도 울타리아 한다는 조급함이 번진다. 문제는 그 열기의 한편에서 '빛투'도 함께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의 올해 1분기 가계신용 통계는 이런 분위기를 숫자로 보여준다.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

'20조 통합지원금'...약속대로 지원 가능한가

그런 점에서 통합시 출범 이후 매년 5조원씩 지원이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20조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구체적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의 성공의 열쇠는 단연 재정 확보다. 하지만 특별법안에는 조세 이양이 빠졌다. 지역에서 강력한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20조 지원에 '꼬리표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특정 사업에 용도를 묶지 않는 재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그렇까. 통합특별법에는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할 근거 법이 모호한 상태다. 20조원이 순수한 예산인지, 기존 예정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제도적 장치 없이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만 기대하는 방식으로는 통합특별시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통합특별시 인센티브를 강제하고 명문화하려면 지방교부세법을 고쳐 '통합 특별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통합특별시를 위한 별도 교부세 항목을 만들면 해마다 일정 규모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나마만 통합특별시가 기업 유치, 산업 전환, 일자리 창출, 삶의 질을 높일 생활여건 개선 등 중장기 사업을 더 계획할 수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제도적 장치 없이 중앙정부가 예산을 쥐고 사업별로 예산을 따로 편성에 배분하면 통합특별시가 지역 실정에 맞게 돈을 집행하기도 어렵다. 그러다 보면 기업유치도, 산업전환도, 일자리 창출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도 매년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도 부담스럽다.

현금 20조원을 한 번에 주는 개념이 아니라, 국비 사업 예산 면제, SOC 산업단지, 에너지광, 공항·철도, AI·데이터센터, 국책연구사업, 공공기관 이전 등을 장기간 합산한 총사업비 성격이 좋다. 통합시 특별법에 '정부가 지원

한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타 지역 반발이 커지면 축소·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물론 입법 과정은 쉽지 않다. 기획예산처 등 중앙 부처의 반응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가 지원 방식과 재정 권한, 지방재정 수요 조정 문제를 함께 논의해 '통합 교부세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나마만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국가 차원의 확실한 재정 지원을 법률로 못 박아야 지역균형발전과 중단없는 전남광주 메가시티 건설이 가능해진다.

전문학적인 인센티브는 반드시 미래 먹거리 중심으로 집중 투자되는 게 바람직하다.

광주·전남은 단순 지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최대 생산지이며, AI 전환의 핵심기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AI 데이터센터 최적지이며, 한전과 전력망 보유, 풍력·태양광·원전·LNG·수소 동시 보유지이고 광활한 산업부지에 항만·공항·항각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AI·에너지·미래차·데이터산업 결합 가능성이 높은 국가전략산업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센터, AI 시설단지, RE100 산업단지, 국가 AI컴퓨팅센터와 유관기업 투자 유치는 물론 초고압 전력망, ESS, 수소, 부산에너지 특구,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에너지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가 요구된다.

여기에도 무안국제공항, 광양항, 목포신항과 냉동·물류·수출기지 활성화와 관련기업 유치도 절실하다.

청년 일자리 확보는 필수적이다. 청년 창업, 주거, 스타트업, 연구인력 양성, 국립대 통합과 혁신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

20조원은 그야말로 전남광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씨드머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단순 행정통합으로 그칠지, 아니면 대한민국 에너지·AI·미래산업 중심지로 도약할지는 지금부터 치밀하고 냉정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민주주의의 사회와 공존할 수 없는 극우세력

다. 광주청년센터 포럼 '청년, 다시 봄'에서도 극우주의를 단순한 정치적 성향 차이가 아닌 사회를 부정하는 움직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회 곳곳에 교묘하게 스며들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억지와 비논리적인 주장으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번 스타벅스 텀블러 판촉 행사 논란 역시 그런 사례로 느껴진다. 단순히 역사적 사건과 내용을 몰라서 벌어진 실수였다고 믿기에는 그동안 반복돼 온 극우세력의 행태를 보았을 때 충분히 의도된 연출로 보여진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정의를 사회 전체의 정의로 착각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발언이다. 이 프레임으로 자신들의 주장에도 정당성이 있다고 포장하고 스스로 믿는 것이다. 물론 생각의 차이는 존재하고, 이러한 차이는 서로 존중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생각이 타인에게 상처와 피해를 주는 순간, 단순한 '다름'의 문제가 될 수는 없다. 필자가 초등학생 시절 배운 '자유'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자유는 사회적 합의와 책임 안에서만 보장된다. 사회적 참사와 정치 보복의 희생자를 조롱하며 기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과 발표가 황당하게 느껴지는 이유도 바로 그 지점에 있다.

필자의 지인 중 광주 출신이 아닌 분이 정말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그렇게까지 분노하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도 있다. 그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실제로 도시에 탱크가 진입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다.

이에 피해자인 지역민들은 이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고통과 억울함이 지금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 드린다. 이번 기회를 통해 관련 역사를 한 번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극우세력에 의해 자유민주주의는 계속 위협받고 있다. 지역과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논쟁과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공생 구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 세력은 사회 내부에 기생하며 갈등과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며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 첫째, 온라인 커뮤니티와 왜곡 콘텐츠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특정 세력의 허위 주장을 믿게 된다.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먼저 입력되는 정보가 잘못된 정보라면 이를 바로잡는데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이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낭비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행위가 다시 한번 더 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겨우 있고 용서하려고 해도 다시 한번 기해가 발생하면 더 큰 상처가 된다. 더 이상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은 결국 사회적 비용과 공동체의 에너지가 소모하게 만든다. 더 이상 이런 역사가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피해자의 상처가 반복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의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예방과 책임, 그리고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극단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우리 모두가 역사와 타인에 대한 감수성,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를 함께 갖춰야 할 것이다.

사설

'밈·댄스 챌린지' 열풍...실제 투표 이어지길

광주 자치구들이 온라인에서 '밈(Meme)' 콘텐츠와 댄스 챌린지 등을 활용해 6·3지방선거 투표를 적극 독려해 눈에 띈다.

먼저 광산구는 지난 27일부터 '왕과 사는 남자'를 패러디한 '왕과 투표 하는 남자'라는 영상을 제작해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월봉서원을 배경으로 한 이 영상은 한명희 역을 맡은 광산구 홍보실 직원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셔야 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말하자, 단종 역의 또 다른 직원이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라고 답한다. 이후 화면에는 '투표하러'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두 사람은 함께 뛰어나간다.

남구도 27일 '너와 나, 만나!'라는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실었다. 홍보실 직원이 노대동 불빛근린공원에서 "투표하러 갈 때 신분증 꼭 챙겨"라고 외친 뒤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29~30일 사전투표와 6월 3일 본투표 일정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북구는 인공지능(AI)을 활용했다. 지난 20일 SNS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참여해야 주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다"라는 말을 인용한 영상을 게시해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영상들은 현재 각각 조회수가 수천회에 달하고 있고 "재미있어서 열 번 봤다", "딱딱하지 않아 보기 좋다", "투표하러 가야겠다" 등 시민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자치구들은 또 오프라인에서는 주요 교차로 등에 선거 홍보 현수막 설치와 교통 지도 차량을 활용한 투표 참여 안내 방송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라는 광주만의 속사정이 있다. 딱히 민주당 후보와 박빙구도를 형성하는 선거구가 없는 탓인지 지난 2022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전국 평균(50.9%)을 크게 밑도는 37.7%라는 전국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이번 선거도 2명의 민주당 구청장후보가 무투표 당선될 정도로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또다시 2022년 지방선거 투표율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얘기다.

광주 투표를 제고를 위한 자치구들의 밈과 댄스 챌린지가 실제 유권자들의 투표로 이어지길 바란다.

문화자산 활용할 산업 생태계 구축 절실

광주·전남에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이 있지만 활용은 '그림의 떡'이다.

이와 연계된 사회적경제·관광산업기반이 취약해 이로 인한 수익 창출은 물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광주·전남의 국보·보물·사적·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등록유산은 광주 32개, 전남 432개 등 총 464개다. 이는 부산·경남 451개, 인천·경기 435개, 대전·충남 290개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국가유산을 기반으로 한 사회경제적 조직은 '열악' 그 자체다.

2024년 12월 기준 국가유산형 사회적기업 31개소, 예비사회적기업 72개소 등 전국에 103개소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지만 지역에는 광주(사회적기업 1개·예비사회적기업 2개) 3개소, 전남(예비사회적기업 2개소) 2개소 등 5개소밖에 없다. 양 지역을 합해도 전국의 4.8% 수준이다.

반면 수도권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기업을 포함해 서울 34개소, 경기 12개소, 인천 4개소 등 절반에 가까운 50개소가 있고 영남권도 경북 12개소, 경남 5개소, 부산 3개소, 대구 3개소, 울산 2개소 등이 있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국가유산청의 사업 개발비 지원속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체험, 전통공예 상품 개발, 공연·행사, 콘텐츠 제작, 도시재생, 보존·관리 사업 등을 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로 2021~2024년 국가유산청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50개 기업 매출은 지원 전(67억4100만원)보다 2배 가까이(120억3200만원) 늘었고, 245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이러한 조직이 없어 유산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 브랜드, 디지털 콘텐츠, 지역 연계 상품 개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곳곳에 역사성과 주민 삶의 기억이 녹아 있는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지만, 산업적 활용과 연결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이들 유산의 보존을 넘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창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인사총무부 370-705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